

인쇄산업의 현실과 미래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민국의 인쇄산업은 근·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대별 상처투성이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시기 항일운동의 주요 매개로서 인쇄·출판을 감시 또는 발전을 저해하였고, 당시 사회 지도층은 대부분 인쇄·출판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던 시기였다.

대표적 사례로 국채보상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은 대구인쇄인들로부터 시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다. 이후 국권이 회복된 후 5·16혁명과 함께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역시 민주화 운동의 주요 매개로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어 근자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인쇄산업은 빠르게 기업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기업형 인쇄산업이 주류를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지식기반산업으로 사회저변에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비단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인쇄인들의 자구적 노력도 있었겠으나 창의적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 그에 못지않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 뒷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본시 인쇄와 출판은 한 몸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우리는 인쇄와 출판이 확연히 분할·구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많은 출판 분야만이 제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구도 속에서 그나마 인쇄산업은 빠르게 제각각 기업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때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선다면 우리나라의 인쇄산업도 정상궤도에 안착할 것이다.

인쇄는 전통적 수주·도심형 산업

인쇄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수주산업이며 도심형 산업이다. 또한 최첨단의 창의적 특성이 강한 디자인을 포함한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문화의 첨병

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제조업이며, 그에 따라 각 개별업체규모 대비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지수가 큰 산업이기도 하다. 인쇄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이기도 하다. 그 나라가 융성하여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그 나라의 인쇄산업은 그 만큼 다양하게 분화 발전한다.

보라! 우리 생활 저변에서 인쇄와 무관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 유형의 어떠한 물체에도 글자·그림 등 어떤 식으로든 표식 되어 있으나 그것이 인쇄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인쇄산업을 두고 이르기를 사양산업이라고 단정한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러니한 것 중의 하나가 IT를 내세우기 위한 인쇄물이 요즘 부쩍 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인쇄산업만의 특성임을 일반사람들은 모른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양하게 분화·발전하듯이 인쇄산업 또한 다양한 생산방식으로 그 문화를 더욱 빛내거나 주도 한다. 그래서 자칫 인쇄산업의 단면만을 보고 사양산업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본다.

인쇄산업단지 조성 절실

현재 수도 서울을 기점으로 파주출판산업단지에 이어 대구가 인쇄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대전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인쇄출판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인쇄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인쇄산업

은 사양산업이며,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조성 협조에 미온적이다 못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작용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쇄산업의 경우 대부분 어느 일정지역에 집적화되어 있으나 오늘날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속에 인쇄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속히 현대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보라! 오늘날 서울의 을지로·충무로 일대의 인쇄거리와 대구의 남선동, 대전의 정동·중동·삼성동 일대의 인쇄거리를. 누가 보더라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 실상을.

진작 해결했어야 할 선결과제 앞에 언제까지 머리만 긁적일 것인가!

세계는 온통 글로벌 전쟁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쇄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인쇄산업단지 추진은 용이하다. 인쇄는 다양한 제품과 생산방식으로 인해 대다수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도하여 추진한다면 나머지 업체들 역시 따라가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 집단 이주가 그만큼 용이하며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도 쉬워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아쉬운데 행정가와 정치지도자의 선협적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각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원인 하나가 있다. 그것은 IMF이후 상 도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상 도리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를 무능과 구태로 받아 넘긴다. 우리말로 상 도리지 서양의 합리적·도덕적 사회기풍 아니겠는가?

환란 이후 자영업 바람이 거세지면서 어느 업종이든 자영업자가 많아졌고 자율경쟁이 격화된 데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입찰이 일반화 되면서 한 업체당 2~3개 정도의 또 다른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기업체 수는 증가했겠으나 그 나물의 그 밥인 식으로 과당경쟁만 부추긴 모양이 되고 말았으니 중소기업간 소모적 경쟁은 눈뜨고 보기 어려운 꼴이다.

이러한 현실은 인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건설했던 인쇄사도 그대로 반영돼 업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작금의 인쇄업계 현실을 살펴보자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체 인쇄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극히 미미한 수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창출하는 형태의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나라 인쇄시장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 회사의 1억 매출에 1천만원 수익을 올리는데, 그들은 1백억 매출에 1천만원 수익을 올려 남아야 어찌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구도로 산업발전이 가능할까? 복리후생이 가능할까?

현재 임금이 하향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불경기가 아니라 덤핑 수주로 인한 특정업체 쏠림으로 대다수 인쇄사가 정상 가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난제 중 하나가 지방선거시 선거인쇄물 생산문제이다.

복수조합 설립 허용은 갈등 부추겨

갑자기 많은 출마자가 단기간에 선거 홍보물을 제작·납품해야 하는데 인쇄시설은 평소의 인쇄물량에 맞추어 있는 관계로 지방선거 때마다 초비상이 걸린다. 내년 6월 선거는 한술 더 떠서 교육감까지 포함한다니 심히 우려된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그분 말씀이 미리 제작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라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제작·납품기간을 좀 더 원활하게 연장하여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쇄인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일하는 동물도 아닌데 몇날며칠 꼬박 밤샘작업을 한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필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또 하나 중소기업관련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복수조합 설립과 복수조합 가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애시 당초 법령의 선의적 취지는 찾을 길이 없이 업계를 분화시키고 갈등만 조장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하루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업계의 갈등을 막아야한다. 적어도 복수가입은 안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